

# 외국인의 韓 주식 사랑, 이면엔 원高... 문제는 핫머니 유입

## 달러의 힘, 新통화전쟁

### 환율하락과 외국인

시장 출렁일 가능성에 대비해야  
'新성장모델'·'체질개선' 필요성

"홍콩에 투자처를 둔 몇몇 외국계 핫머니들이 한국시장을 사냥터로 삼고 있다. 환차익을 노린 투자자들이다. 하지만 금융시장이 출렁일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외국계 IB 고위 관계자)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주식 사랑이 놀랍다. 올해 들어서만 1조9756억원이 넘는 뭉치돈을 쏟아 부었다. 북핵 리스크와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지만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가 두텁다는 방증이다. 다만 글로벌 금융환경과 외환시세 차이를 이용한 재정거래(차익거래) 성격의 투자가 많다는 분석이 있다.

특히 미국발 통화전쟁의 파장이 커진다면 금융시장도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원화값이 떨어진다면 한국 경제의 베타목인 수출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외국인이 한국시장에 오랫동안 머물게 하고 발길을 돌리려면 '새로운 성장모델'과 '체질 개선'을 통해 한국 경제를 한단계 더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1일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2.08(0.08%) 오른 2,568.54로 장을 마쳤다. /연합뉴스

고 조언한다.

### ◆환율과 외국인의 불편한 동

외국인이 원화값 하락에 베팅하고 있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1월 한달간 1조9756억원어치를 사들였다.

외국인이 언제까지 한국 주식을 살까. 증권가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외국인은 원·달러 환율 1150원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주식을 사들였다. 하지만 1150원을 넘어가면 차익실현 물량을 쏟아냈다.

구간별 순매매 규모를 보면 외국인은 1100~1150원 구간에서 35조6000억원어치를 순매수했고 1150~1200원 구간에서는 13조9000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외국인은 또 2013년 이후 원·달러 환율 하락(원화 강제)이 두드러진 여섯 차례 구간

에선 2015년 9~10월을 제외하고 모두 '매수 우위'를 보였다.

최근 증시에서 가장 핫 한 이슈 중 하나가 환율이다. 원화값이 강세면 외국인 자금유입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경험적으로도 외국인은 환율에 민감하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원·달러 환율과 코스피지수의 상관관계는 -0.41이다. 원·달러 환율이 하락(달러 약세, 원화 강제)할수록 코스피지수가 오르는 얘기다. 상관관계는 -1에서 1까지 나타나는데 0에 가까울수록 관계가 없다.

미래셋대우 고승희 연구원은 "국내 증시도 외국인 순매수가 지속되며 사상 최고치 경신했다. 주식형 펀드로의 자금 유입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에서 국내 증

시에 대한 외국인의 순매수 기조는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환율 하락도 지나치면 독이다. 2001년 이후 외국인은 원·달러 환율 1050원 이하에서 순매도했다.

이베스트투자증권 최광혁 이코노미스트는 "외국인 입장에서 환차익은 환율 수준보다는 방향성이 더 중요하다"면서 "실제로 환율 구간별 외국인 순매수 대금을 살펴보면 2008년 이전에는 원·달러 환율 1050원 미만에서 외국인이 순매도를 보였지만 금융 위기 이후에는 이러한 현상을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채권시장도 마찬가지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외국인의 국내 채권 보유 잔액은 98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89조3000억 원)보다 9조2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외국인의 원화 채권 순매수 규모도 2016년 12조7000억 원에서 지난해 36조3000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 ◆단기 핫머니 경계해야

외국인 매수에 대한 경계를 늦춰서는 안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글로벌 자금시장이 조금이라도 경직되면 한국에서 자금을 빼내는 등 한국이 현금자동인출기(ATM)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08년 금융위기(258억달러 이탈)는 우리에게 적잖은 교훈을 준다.

유진투자증권 신동수 연구원은 "외국

인의 원화채권 투자가 대부분 만기 3년 이하의 단기채에 집중되고 있다. 올해 1월 15일까지 외국인의 순매수 규모가 5조 1000억원인데 이중 3년 이하 채권 비중이 무려 90%를 넘어서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의 보유채권 듀레이션도 축소 추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달러화 약세로 원·달러환율의 하락 여지가 존재하나 점차 강화될 미 연준의 긴축 기조를 고려하면 원·달러환율의 반등 리스크도 작지 않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유동성을 붙잡아 둘 '풀 팩터(Pull factor·흡인요인)'도 약하다.

대내적으로는 외국인 대주주 양도세 강화가 발목을 잡고 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는 외국인 투자자가 상장사 주식을 매도할 때 과거 5년간 한 번이라도 5% 이상 지분을 보유했다면 매각금액의 11% 또는 매각차익의 22% 중 낮은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 양도세 규정은 그동안 상장 주식 25% 이상 보유자에 대해 적용해왔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외국인 투자가 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조세 조약이 체결된 대부분 국가에서는 거주지 과세가 원칙"이라며 "시행령 개정은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일부 국가에 관한 것들이어서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한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 한국암웨이

### 조직개편·임원인사 단행 전방위적 고객 점접 강화

한국암웨이가 조직 역량 강화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한국암웨이는 중장기 미래 사업 전략인 '암웨이 넥스트(Amway Next)'의 일환으로 2018년 조직개편 및 주요 임원인사를 단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영업조직의 맞춤형 컨설팅과 더불어 전방위 고객 점접 강화로 꼽힌다. 체계화된 분석을 통해 빅데이터에 기반한 사업자 대상 개인 맞춤형 컨설팅이 제공되며, 암웨이플라자 등 오프라인 체험 부서와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부서가 영업조직 안에 유기적으로 통합되며 온·오프라인 고객 접점이 강화된다.

강화된 영업 및 영업지원 조직은 신입 최고영업책임자(CSO)를 통해 전략적으로 통합 관리된다. 기존 영업 담당 임원이었던 마이크 김 상무이사(전무이사)가 승진하며 이 역할을 맡게 됐다. 김 전무는 인사 컨설팅 분야 전문가로, 2012년 한국암웨이에 합류한 이후 인사 총무 임원과 영업 전략기획 임원을 거치며 성장 전략 수립, 사업자 관계 개선 측면에서 성과를 인정 받았다.

기존 전략기획 담당 임원이었던 문수진 상무이사 역시 전무이사로 승진하며 영업 조직에 합류한다. 공학박사 출신인 문 전무는 기존 유수의 글로벌 기업에서 경험했던 기획, 영업 및 마케팅, R&D 분야 전문성을 기반으로 2017년 입사 이후 전략 혁신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냈다.

한편 문수진 전무와 더불어 마케팅 담당 임원인 김은아 이사가 상무이사로 승진하고, 인사·총무 담당 임원인 박진숙 상무이사(전무이사)가 승진하는 등 여성 임원들의 약진 또한 눈에 띈다. 한국암웨이의 여성임원 비율은 50%에 달하는 등 조직 전반에 걸쳐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DNA가 원만하게 정착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40대 임원 중 하나인 법무 담당 임원 이준범 상무이사도 전무이사로 승진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 최종구 금융위원장 “기축법, 무작정 관치 취급해선 안돼”

금리 인상기 한계기업 증가 우려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유용 수단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축법)은 금리 인상 등 불확실성 증대에 대비하는 유용한 수단”이라며 “관치라고 치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축법 성과와 평가’ 공청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기축법은 주채권은행이 주도하는 워크아웃 제도의 근거가 되는 법으로, 2001년 제정돼 한시적으로 적용·유예돼 왔다. 올해 6월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최 위원장은 “기축법의 공과에 대한 많은 의견이 있는데 시간을 되돌려 기축법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본다”며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이 급격한 부도를 맞고, 대출한 채권 단들도 동반 부실화해 국가 경제 전체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그간의 성과와 평가’ 공청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에 큰 충격으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기축법에 대한 관치 논란과 관련해서는 “특정 기업의 인사나 대출에 개입하는 것은 관치라 할 수 있겠지만 위기 발생 시 국가 경제 전체 차원에서 파급 효과가 큰 산업을 지원할 제

도적 틀을 만드는 것을 관치라고 치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이제는 기축법이 채권자 평등, 기업의 사적 자치 권리 보장에 부합하고 오히려 관치적 요소가 많이 희석됐다고 보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앞으로도 기축

법은 자율적 구조조정을 위한 약속 규범이자 절차법으로서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금리 인상기에 한계기업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 기축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시중금리가 본격적으로 인상기에 진입하면서 기업들의 부채 상환 부담이 증가하고, 한계기업 수도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며 “기축법이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기업구조조정에 있어 채권은행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조조정에 투입된 채권의 회수 극대화라는 목표에만 집착해선 안된다는 뜻에서도.

그는 “기업구조조정에 있어 채권은행의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필요하다”며 “채권은행은 기업의 혁신과 재기를 지원하는 도우미로서의 역할, 구조조정 시장의 마켓메이커(Market maker)로서의 역할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지난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상장회사 주주총회 지원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상장회사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 주총 자율분산 프로그램 운영·주주 의결권 행사 활성화

>> 1면 ‘슈퍼 주총데이...’서 계속

### TF, 전자투표 모바일 서비스 실시

주주명부폐쇄 기준일을 회사 자율로 정하고 결산기 말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한 주총 소집 기간 제한을 폐지하는 것. 이익배당기준일도 영업연도 말일부터 배당일 전일 중 하루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장사협의회·코스닥협회가 주관해 주총 자율분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협회가 집중 예상일을 선정해 사전에 안내하면 상장사들은 이사회 결의 전

주총 개최 예정일자를 2월 20일까지 통보해야 한다.

상장기업의 주총 예상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홈페이지를 만들고, 동일 날짜에 주총을 개최하는 회사 수가 200개를 초과하면 협회가 분산을 유도한다. 만일 상장사가 주총 집중일에 주총을 개최할 경우 주총 2주 전에 그 사유를 한국거래소에 신고해야 한다.

주총 자율분산 프로그램에 참여한 회사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불성실공시 별첨 감경, 공시우수법인 평가 가점,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수수료 1년간 30% 인하 등의 인센티브를 줄 예

정이다.

TF는 또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자투표 모바일 서비스도 실시한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에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은행용 공인인증서도 활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새도보팅 제도가 작년 말 일몰되면서 기업은 좀 더 많은 주주를 주총에 참석시켜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며 “이번 주총 활성화 방안이 시행되면 슈퍼 주총데이가 해소되고 2%에 머물던 전자투표 행사율이 대폭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